

전북자치도민 권익증진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 함께 권익!' 선언식을 개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 최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와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권익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도-시군, '새로운 전북자치도! 다 함께 권익' 선언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등 앞장 전국 최초 중앙-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 간 협약 체결

선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리 절차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도민 권익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 도

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

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라며, "오는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더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가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와 민생관련 청소년 사건 처분 감경기준 완화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14개 시군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 오성한옥마을 이원 한옥.

(사진=조정형씨 제공)

도내 최고의 생생마을은 어디?

전북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성료 오성한옥마을 등 '마을 만들기 분야'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11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분야별(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우수사례 8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의 지역 예선전이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다.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분야별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마을 만들기 분야 5개 마을과 농촌 만들기 분야 3개 마을을 도 본선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1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발표평가에서는 마을의 우수사례를 인형극, 단체 율동, 마을 영상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참가지역 주민들의 열띤 응원

이 어우러져 마을주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제11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종심사 결과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는 완주군 오성한옥마을, 진안군 봉곡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 농촌 만들기 분야에서는 장수군 계곡면, 순창군 인계면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4개 마을은 9월에 개최되는 전국 행복농촌 마을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여 타 시·도 마을과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오성한옥마을은 전주 인근 완주 소양에 위치해 20여년간부터 한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마을로 마을살이를 주제로 외지인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는 등으로 유명세를 타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20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자치도, 다 함께 권익 선언식'에서 도민 권익보호, 행정심판 제도 강화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기대감 'UP'

자치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익산시와 추가 투자협약 오가노이드 연구·제조기술 협업 따라 관련 사업 탄력

전북자치도가 2018년 국내 최초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설립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일 국내 오가노이드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 앵커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

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선도기업으로 참여, 특화단지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추가 투자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긴밀한 협업 추진을 약속했으며, 연구·제조기술 투자 구체화에 따라 향후 첨단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R&D, 레드바이오 전용 펀드, 투자보조금, 시제품 생산 등 4년

계 전주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에 매진하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경기, 대전, 충북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가노이드 선도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추가 투자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바이오 특화단지도 반드시 유치해 재생의료기술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을 가진 기업이 모이는 전북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시정질문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20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나선 김정현 의원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규범과 원칙을 정립하고, 공제보험의 관리 운영 실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유재산 관련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시민과 상생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연재해와 재난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앞으로 행정수요, 복지수요 증가 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0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임기 마지막 회기 일정임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올린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20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3,083억으로, 1조3,509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3,374억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1조823억원이 지출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 발생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에서 황배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제=곽두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전북 방문 장쑤성 인대와 교류확대 모색

지난 5월 중국 방문 화담 2019년 이후 5년만에 추진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는 지난 19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타우 장성' 부주임 및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의회 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북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표단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됐다.

중국 장쑤성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산업단지, 임실치즈농협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경제,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양 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장쑤성 인대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고, 28년 동안 양 의회 간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온 친구"라며 "28년이라는 시간은 아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와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간 이나만큼 양 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펼쳐서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타우 장성' 부주임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에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며 "이번 방문

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양 지역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숙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라고 화담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 3국의 주요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22건 안건 의결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간담회, 현정방문 및 '군산시 지방공무

원 북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7,663억1,500만원 가운데 4억7,550만원을 삭감한 1조

7,658억3,95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스마트 행정시대 설치 및 공사 1억원(공보담당관), 공공자전거 구매 사업 9,000만원(건설과) 등 12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청소년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구제

민주김윤덕 의원, 법률안 4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19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윤덕 의원의 네 가지 대표 발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람·출입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서민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며,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정수 도의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했으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빠져있다.

김정수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4차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